

민주, 전당대회 공명선거 서약... 경선 레이스 돌입

박찬대 “굳건히 단합하는 승부”
20일 제주서 합동연설회 시작
이재명·김두관·김지수 3자구도
최고위원 후보 강성 친명 일색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후보들이 15일 공명선거를 실천하겠다고 서약하면서 본격적인 전대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당대회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구태가 판을 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반면교사 삼아 치열하게 경쟁하되 품위있고, 굳건히 단합하는 승부를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거관리위원장도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통해 보여줬던 민심 요구에 당이 응답을 해야 할 때”라며 “이번 전대를 통해 수권정당으로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되살릴 유일한 정당이 민주당이란 확신과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결과와 과정이 참으로 완벽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전대 후보자들은 서약서 낭독에서 “선거운동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 금품살포, 향응제공, 후보 자비방, 흑색선전, 지역감정조장 등 클린



이재명(왼쪽) 선거관리위원장,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당원대회 후보자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에서 서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부터 김병주·강선우·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김두관·김지수·이재명 당 대표 후보, 김민석·이언주·한준호·전현희 최고위원 후보. 뉴시스

선거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후보 모두가 당원과 국민과 함께 단합하며 더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민주당의 개혁과 승리의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

선에 나선다.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간 3자 구도로 치러진다.
최고위원 경선은 후보 8명이 ‘진짜 이재명계’, 이른바 ‘진명’임을 부각하고 있어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친명계인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후보(기호순)는 예비경선을 통과해 5명을 뽑는 본경선에 올랐다.
본선은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일반국민여론 30% 투표가 반영된다.
이재명 후보 핵심 지지층을 포함한 권리당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재명, ‘종부세 완화’ 비판에 “다양한 입장 조정이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5일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실천 서약식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두관 당 대표 후보 측은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 측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이 추진해 온 세제 정책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종부세 검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냐”고 반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도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인철,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대 등 법안 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사진)은 15일 ‘스콜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스콜존 내, 전면 뿐만 아



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해 오토바이 등의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

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민의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5일 LH 매입 조건 등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제출한 자리에서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이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 도모하고 보증금 손해가 최대한 보전·지원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형배 “호남 대표해 지역 요청 실현하겠다”

시의회서 최고위원 출마보고 회견 “윤 정권 퇴출, 검찰개혁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인 광주를 찾아 “윤석열 정권 퇴출하고 검찰개혁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15일 광주시의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보고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비장한 결심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와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 승리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울 전사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최고위원 예비후보 8명 중 7명이 서울·경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서울·경기 밖의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후보는 민형배 한 명뿐”이라며 “광주·호남을 넘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지역의 간절함 바람들을 민주당에서 관철 시키겠다. 힘 있는 최고위원으로 지역을



민형배 국회의원이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보고회를 하고 있다.

대표하고 지역의 요청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의원은 그간 호남 지역 의원들이 당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 것을 되짚으며 “지역 경제·민생·정치혁신을 위해 선출직으로 당당히 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전북의 이성운 의원(전주을)이 이번 예비경선에서 탈락하면서, 호남 지역구 최고위원 후보는 민 의원이 유일하다. 앞서 전북 한병도 의원과 전남 서삼석 의원, 광주의 송갑석 전 의원 모두 낙선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 검찰 정상화를 위해 탈당이라는 고통을 선택했고, 욕 먹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홀로 버텼다”며 “선택에는 오해와 고통을 뚫고 나갈 용기가 필요하다. 소신 있게 실천하는 용기를 가졌다고 자부한다. 민형배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이주호 “전남 의대 신설 논의, 현 상황 완결 후에”

교육위서 김문수 의원 질의에 답변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검토 필요”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논의 될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 의대 신설을 재차 촉구하는 김 의원의 질의에 “지금만 일단 2000명 증원이 배정된 상태이고, 신설에는 배정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의대 증원) 상황이 완결되면, 그 이후에 어젠다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의대 증원 갈등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에 전남 국립 의대 등의 신설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칫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 상황이 장기화 하면, 전남 의대 신설 논의도 기약 없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도입에 대해선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가 지역완결형 필수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부의 목적과 부합한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강제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여러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교육부 차원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이다. 지역인재 선발로 들어온 의대생들은 그 지역에 남는 확률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두세 배가 높다”며 “(정

부는)지역인재 전형을 더 확대한다던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금 제도보다 나아 수 있어도 서울에 있는 학생이사와서 지역인재로 입학한 다음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의사제 도입할 생각이 전혀 없냐”고 되물었다.

이 장관은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복지부와 다시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지역의사제 반영 여부를 포함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